

석화제품 출하량 평시 21% 수준 ... 피해규모 1兆 이상 추정

3일까지 누적 출하차질 78.1만t
정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나서
현장점검·비상운영체계 유지 당부
산자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4일 울산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석유화학 업계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확대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시멘트 업계에 이어 정유 등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도 내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책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를 출하 중이며, 지

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톤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그간 선출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왔다.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와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 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지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공장이 멈추면, 최소 하루 평균 123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장 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

심 원자재로, 금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운송방해와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달라”며 “정부도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협단체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학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방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화학협회 역시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1차관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 증대라는 3중고 속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급변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 주유소 확산 방안을 위한 비상운영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천안저유소는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정유4사 등과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해 주유소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은 긴급 투입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휘발유 품질사태 확산... 전국 70개 이상 주유소 업무마비

주유소 기름재고 평균 2주... 전국 비상
정부,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 이어진 4일 '휘발유 품질'을 내건 주유소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은 3일 기준 서울 31개, 경기 15개, 강원 10개, 충남 9개, 충북 3개, 인천 3개, 대전 2개, 세종 1개로 전국 74개 주유소가 품질 사태를 겪고 있다고 공지했다. 지난 1일에는 33개, 2일에는 전국 52개 주유소가 품질 사태를 겪어 점차 품질 주유소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에 주유소들이 미리 휘발유·경유 재고를 확보해왔지만 소비자 수요가 많은 곳은 휘발유부터 재고가 동나기 시작한 것이다. 파업 초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질 주유소가 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터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들의 기름 재고는 '평균 2주'였다. 주유소마다 석유 제품이 팔리는 속도가 다르지만 한 달에 2회 정도 재고를 확보하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이상으로 확보하려 해도 주유소 기름 저장 탱크의 용량이 부족하기에 주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품질은 수도권 지역 주유소에서 '휘발유' 제품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

부분의 주유소가 휘발유 저장 탱크가 경유 저장 탱크보다 작은 탓이다. 여기에 경유 소비자들은 대부분 시내 외곽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도심 경유 품질은 휘발유보다 늦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제품은 탱크로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개인이 임의로 일정량 이상으로는 운반할 수 없어 더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인접 주유소끼리 수송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파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름 제품 스와프를 할 수 있는 주유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한 정부는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며, 대체 탱크로리 60대가

량을 확보해 긴급운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약 70%, 수도권은 9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저유소에는 기름이 충분하지만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가 현저히 부족해 일선 주유소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 지역마다 저유소가 있지만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도를 넘나들며 석유 제품을 유통하는 주유소들도 생겼다. 저유소에서 출발할 수 있는 탱크로리의 상황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유분야도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정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흥부자, 향후 수익률 높은 투자처에 '부동산' 꼽아

>> 1면 '3040 신흥부자...'서 계속

신흥부자의 종잣돈 기준은 최소 7억 원이다. 종잣돈을 모은 주된 방법은 부동산자산 투자(46%)와 근로소득(43.7%), 부모로부터의 지원·증여·상속(40.2%)이 많았다. 디지털 자산 등 기타자산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경우는 0%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신흥부자는 종잣돈을 마련한 뒤 주식 투자와 예·적금 적립으로 자산을 키웠다. 가장 주된 방법은 주식 투자(54.0%)였고, 거주용 외 일반 아파트

(36.8%), 예·적금(31.0%), 거주용 부동산(24.1%), 토지·임야(17.2%) 등의 순이었다. 신흥부자는 주식, 예·적금,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불린 반면 전통부자는 재건축아파트, 토지·임야,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을 키웠다.

다만 신흥부자가 생각하는 향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는 금융상품보다 부동산이 많았다.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유형은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주택'으로 각각 42.5%를 차지했고, 금융상품으로는 주식 34.5%를 차지했다.

◆'부채, 자산아냐'...코로나때 빚부터 갚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부자는 금융 자산은 줄이고 부동산 자산은 늘렸다. 금융자산 비중은 2019년 41.2%에서 2020년 39.9%, 2021년 36.6%로 점차 감소한 반면 부동산 자산비중은 같은기간 54.3%에서 56%, 59%로 늘었다.

보수적으로 부채도 관리했다. 한국부자에게 부채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부채는 자산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3%에 그쳤고,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증액된 지원사업 예산 혜택 다 못 받을 수도”

>> 1면 '여야 극한의 대치...'서 계속

정부가 새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 규모를 늘린 민생 지원 사업 등 재량지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량지출은 297조3000억원 규모로 총지출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출 사업의 절반 가량이 묶인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

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아동과 청년, 노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이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물가 등을 감안해 늘린 지원 사업 예산의 혜택을 다 못 받게 된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정기한 내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